

# 姜시장 “지역 강점 살릴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담양군 상생토크'에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 이후 담양군의 발전 전략과 지역 변화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구례·담양 통합 상생토크

### 구례군, 생태관광·문화 연계 상생발전

### 담양군, 인문특구·생태관광벨트 구축

광주시가 구례군과 담양군에서 '광주전남 통합 상생토크'를 잇따라 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지역의 변화와 비전을 군민들과 공유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오전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세미나실에서 구례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 구례군 상생토크'를 열었다.

이날 상생토크는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열 번째 자리로 지리산과 섬진강 등 구례군의 천혜 생태 자원과 천년문화자산을 활용한 광주·전남의 균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통합에 대한 정부 특전(인센티브) 등을 설명하며 구례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생태관광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광

주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전라선 고속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 ▲유기농산업 등 농·수·축산업과 AI를 결합한 미래산업 육성 ▲지리산·섬진강 권역 체류관광 거점 조성 ▲모두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누리는 돌봄특구 지정 등 핵심 특례를 소개했다.

이어 오후에는 담양군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담양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토크를 열고 통합 이후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담양군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광주·대구 달빛철도, 제3순환도로(담양 대덕·화순) 확충을 통한 광역 교통망 구축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확산 ▲담양호·추월산 등 생태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담양·광주·장성·화순 등을 하나의 '광주 경제권'으로 묶어 모빌리티, AI, 소풍·의료·교육 등 고급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는 광역발전 비전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상생토크에서 제시된 구례·담양군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변은진 기자

# 金지사 “복구 산업 대전환”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6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광주 자치구 초청 복구 타운홀미팅'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광주서 4번째 타운홀미팅

### 통합시 미래 비전·발전 전략 공유

### 문화·관광 분야 등 중요 역할 기대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열어 AI 집적단지,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 등 복구 현안과 연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광주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진행 중인 시민 소통 프로그램의 네 번째 일정이다.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이후 통합 논의가 본격화에 오른 가운데 지역별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타운홀미팅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문인 북구청장, 북구의 장과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 경과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상, 특별법 주요 특례, 복구 비전 등을 PPT로 직접 설명하며 통합특

별시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에는 국가 컴퓨팅센터 발전 전략, AI·문화 분야 공공기관 우선 유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제시된 의견은 향후 통합특별시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 모델로서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대전환의 중심에서 복구는 ▲AI 집적단지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AX 실증밸리, AI 모빌리티 신도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 ▲첨단의료 기기 집적단지와 연계한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광주비엔날레와 국제수목비엔날레 동시 개최로 세계 3대 비엔날레 도약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미래산업과 문화·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9일 남구 타운홀미팅 일정을 끝으로 광주 자치구 순회 타운홀미팅을 마무리하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그동안 수렴한 시민 의견을 종합해 통합특별시 출범준비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9억3천444만원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재산정됐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

선거구 인구 증가·물가변동률 반영

비례대표 시의원 2억2천900여만원

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 5천364원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해 기준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선거구 내 인구 수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물가 변동률 8.3%가 적용됐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

